경찰 '시민청문관' 제도 실효성 갸우뚱

유가인 기자 | 승인 2024.10.21 18:13 | 3면

갈수록 줄어드는 정원…대전은 2명뿐
"임기제 신분 특성상 활동에 제한, 한계 극복해야"



대전일보DB.

버닝썬 사태를 기점으로 경찰 조직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시민청문관'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원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는 데다 해당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 이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정원 대비 현원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 등 경찰 조직의 각종 유착 비리로 추락한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자는 취지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다.

본청·지방청·경찰서 등에 1명씩 6-8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 요소 진단과 부패행위 조사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정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74명(현원 73명), 2021년 274명(96명), 2022년 169명(96명), 지난해 76명(62명) 등이다.

대전 지역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역 내 시민청문관은 2020년 7명(현원 5명), 2021년 7명(5명), 2022년 7명(4명), 지난해 3명(2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대 대전청에 시민청문관이 2명 있고 조직 내 청렴 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청문관이 강의, 행정 업무도 보고 있다. 활동에는 무리 없이 끌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모르는 경찰관이 적지 않은 모양새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시민청문관 제도를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며 "부서마다 시민이 협력하는 위원회 등이 있지만, 해당 제도는 현장 경찰들에게도 생소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원 수가 축소하고 임기제 공무원 특성상 당초 취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인다.

경찰과 시민 사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나름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활동이 이뤄지려면 이러한 한계점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청문관 제도의 이점이 상당히 많지만, 적은 인력과 임기제라는 신분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청문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정규직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제도가 잘 정착하고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가인 기자 rkdls1201@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